

외국인주민의 시정참여 활성화 방안: 진주시를 중심으로*

이 정 석**

이 혜 진***

국문요약

과거의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이 외국인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과 정착에 초점을 맞춰 왔다면, 본격적인 다문화사회가 도래한 오늘날에는 그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식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진주시 외국인주민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외국인주민이 주민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제대로 정주할 수 있도록 시정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인식조사 결과를 감안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외국인주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문화에 관한 인식 전환 및 교육·홍보 강화, 실질적인 시정참여 기회 확대, 법·제도의 개편·정비, 인프라 보완 및 구축 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러한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다섯 가지 정책 제언을 하였다. 즉,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부서별 지원사업의 연계 추진, 외국인주민을 직·간접적으로 참여시키는 실질적인 시정참여 수단 강구, '외국인주민도 이웃'이라는 다문화공생의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지속적인 설명 등을 통해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진주시 당국과 주민들이 외국인주민을 위해 배려하고 있다는 점을 자각할 수 있는 '감동행정' 전개 등이 그것이다.

주제어: 외국인주민, 시정참여, 진주시, 활성화

I. 서론

‘다민족·다문화사회’의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인 외국인주민¹⁾ 1백만 명 시대를 돌파하기가 무섭게 그 수가 점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부(중앙·지방)의 정책은 강한 변화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는 외국인주민의 증가에 부

* 본 논문은 「진주시 외국인주민의 시정참여 활성화 방안」(2013)을 발전시켜 작성한 것으로, 한국정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의 발표 등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완성하였음을 밝힌다.

** 제1저자

*** 교신저자

1) 이 용어가 조례명과 조례 본문 내용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5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로부터 「외국인주민 지원 표준조례안」이 시달되면서부터이다. 그 전까지는 ‘거주외국인’이라는 용어가 통용되었는데, 2006년 10월 31일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가 시달했던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이 근거가 되고 있다.

응하고자 5년 단위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는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3-’17)」이 시작되었으며, 개방·통합·인권·안전·협력이라는 다섯 가지의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업을 통해, 총 1,272개의 외국인정책 관련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확정된 법무부의 「2014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서는 “외국인정책, 경제 활성화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취지로 개방에 해당하는 경제 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더욱이, 외국인주민이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서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면,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인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중한 지역인적자원으로서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활성화와 시정발전을 위해 이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내지 시책은 시혜적 성격이 강했다. 반면, 외국인주민을 진정으로 ‘주민’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지역공동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시정참여를 촉진시키려는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과 정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과거의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은 인구 구성의 변화(외국인주민 비율 증가)가 현저한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그들을 통합하고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외국인주민의 시정참여에 대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용이하게 하고, 주민의 일원으로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즉,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정책은 시혜성 지원을 지속하면서도 그들의 직접적·간접적 혹은 소극적·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다문화공생·공존의 환경 조성과 지역의 현실에 맞는 시정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이 주민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정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의 혁신도시이면서, 남부권의 발전을 선도하는 성장거점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진주시의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요구사항들을 파악한 후, 관련 정책과정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궁극적으로 다문화공생사회의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상남도 진주시의 다문화정책(외국인주민의 시정참여 정책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 내용은 크게 외국인주민의 시정참여에 대한 이론적 고찰 부분과 실증적 분석 부분으로 나뉜다. 이론적 고찰을 위해 외국인주민 시정참여 활성화 관련 선행연구, 외국인주민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의 변화, 중앙·지방정부나 관계기관의 통계자료 혹은 온·오프라인 자료 등의 검색을 통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고, 실증분석을 위해 선행연구 등에서 추출한 변수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조사는 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원어민교사 등을 대상으로 시정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인식조사를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9.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표본의 특성과 기술통계분석을 중심으로 실시하였고, 각 문항별로 필요에 따라 응답자 특성에 따른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외국인주민의 시정참여 방안을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II. 이론적 논의와 실태

1. 외국인주민의 시정참여

한국에서는 참여정부 시절에 다문화사회를 표방한 이래로 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다수 시행되어 왔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문화주의가 새로운 국가통합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다문화정책은 단일민족주의라는 이념에 맞서는 획기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정책과정에 대상 집단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으며, 한국사회로의 동화만을 강조하고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성은혜, 2011: 248).

또한, 한국의 외국인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정책체계가 지방정부로 하달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져 왔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중요 정책대상으로 삼는 특정 유형의 외국인주민에게만 적용되는 복지서비스에 집중되어 예산이 편성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박세훈, 2011; 정미애, 2011; 이혜진, 2012; 정명주, 2012; 최병두, 2012; 하영수 2012).

특히, 박세훈(2011: 14-17)은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 중 광역시를 제외하고 외국인 인구 비중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도시를 ‘외국인 집거도시’로 설정하여 11개의 도시의 외국인정책을 분석했다. 그 결과, ‘외국인 집거도시’는 외국인정책이 가장 활발한 도시로 추측해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외국인정책에 머물러 있음을 밝혀냈다. 즉, 외국인의 즉각적인 필요에 대응하는 긴급지원 형태의 정책이 주를 이루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외국인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인주민과의 통합을 유도하는 정책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상담’과 ‘통역’ 지원만으로는 외국인주민의 사회적·경제적 능력을 제고할 수 없고, 지역주민으로서의 시정참여 확대 등은 일부 시도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비중이 작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낮은 수준’의 외국인정책에서 벗어나서 보다 통합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하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다문화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전통적 정부 중심의 행정의 특성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우양호, 2013).

또한, 정명주(2012)는 지방 단위에서의 외국인 시책, 다문화 시책이라는 것이 외국인주민들에 대한 생활편의를 위한 사회통합적 관점에서의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지역에서의 내향적 국제화를 가능케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지역 차원의 외국인정책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을 예산·사업·조직 등 세 측면에서 분석했다. 그 결과 조직의 정책적 의지와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는 예산 규모 면에서 여전히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사업 측면에서는 결혼이민자라는 특정 집단에 서비스가 편중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대상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제공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직 관계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능 분담이 불명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와 민간단체와의 역할 분담 및 네트워크도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밝혀냈다. 더욱이, 정부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정책만 보더라도, 정향성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정장엽·정순관, 2013).

이상과 같이, 한국에서의 관련 선행연구는 외국인정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외국인정책이 어떤 모습을 갖추고, 어떤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²⁾.

한편, 한국보다 일찍 외국인주민의 증가를 경험한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의 외국인주민 정책에 관한 연구들은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중에서도, 渡戸(2009)의 연구는 외국인주민 정책을 ‘응급대책기’(1980년대), ‘지원·참여정책기’(1990년대 후반), ‘통합정책기’(2000년대)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는데³⁾, 외국인주민 정책의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외국인주민 정책은 여전히 ‘응급대책기’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할 수 있는데, 앞으로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 어떤 방식의 정책이 필요한지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⁴⁾. 아울러, 駒井(2006: 183-184)는 외국인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하마마츠시(浜松市)를 비롯해 가와사키시(川崎市), 오오이즈미쵸(大泉町)와 같은 선진적인 기초자치단체들의 외국인주민 정책을 분석한 다음, 공통적인 특징으로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의 자율성, ㉡외국인주민의 주체적인 시정참여 보장을 위한 의회와 유사한 외국인주민회의의 존재, ㉢정책과제로서 사회보장 및 아동교육, ㉣NGO와의 협동 및 지원, ㉤지역공생의 확립을 위해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빈번한 회의 개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외국인주민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소통과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참고가 된다⁵⁾. 이상의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이후에는 진주시의 외국인주민의 시정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다만, 이정석(2008b)이 광역자치단체(경상남도) 단위에서 외국인주민의 도정참여 활성화 문제를 설문지 조사 및 사례연구 등을 통해 다루고 있어, 본 연구의 진행에 있어 폭넓게 참고하였다.
- 3) ‘응급대책기’는 1980년대 새로운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정보의 다언어 제공과 상담창구 등이 설치되지만, 지방자치단체 시책이 단기체류자형 시책에 머물러 있는 시기를 말한다.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외국인이 지역에 정착·정주화하는 경향이 현저해지면서 생활 전반의 문제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주민 정책의 체계화를 모색했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지역과 행정에 ‘참여’하도록 노력했는데, 이 시기를 ‘지원·참여정책기’로 분류했다. ‘지원’에는 자원활동가·NGO·에스닉집단 등과 ‘협동’이, ‘참여’에는 외국인주민의 자문기관이 설치되는 시점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제인(日系人)이 집중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하여 2001년에는 외국인집주도시회의를 결성하여, 중앙정부에 대해 외국인정책의 체계화를 요구함과 동시에, ‘다문화공생’라는 슬로건에 맞게 지역의 기업, 경제단체, 입국관리소, 경찰, 자치회, 에스닉집단 등과 협력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외국인의 지역통합정책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통합정책기’에 해당한다(渡戸, 2009: 178-179).
- 4) 장임숙·이수상(2012)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지방정부의 다문화공생시책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정보지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지원정책이 토대가 되어 외국인주민 정책이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5) 각 지역별 사례연구가 많지만, 하나만 예시하자면 브라질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하마마츠시(浜松市)의 외국인정책이 주목할 만하다. 하마마츠시에서는 외국인주민을 지역구성원으로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과제를 강구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참정권을 가지지 못하는 외국인주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도달할 수 있게 고안된 것이 ‘외국인시민회의’이다. 이중언어로 기본교과목을 가르치는 외국인아동 지원 교실의 개설은 ‘외국인시민회의’가 요청해서 실현된 것이다. 더욱이 외국인주민들이 집거하는 공영주택단지 문제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공생회의’를 개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原田, 2004).

우선, 본 연구의 대상인 외국인주민이란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명시된 “(진주)시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은 물론 ‘어쩔 수 없이 비합법적인 체류자가 된 생계형 불법체류자’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설정한다⁶⁾.

외국인주민의 참여행위와 관련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참여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외국인주민의 참여 대상이 ‘시정(市政)’으로 명확하며, 진주시 당국이 외국인주민을 정책과정에 참여 또는 관여시키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2007년 3월 6일에 국내 거주 외국인을 지방자치법⁷⁾상의 ‘주민’으로 인정하는 ‘거주외국인 정착지원 업무편람’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바가 있는데, 현재 외국인주민의 지위는 ‘주민’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외국인이 시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민’으로서 시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소위 주민참여에 해당되는 것이다. 주민 또는 시민의 행정참여는 일반적으로 주민참여 내지 시민참여로 통칭되고 있다. 흔히 주민참여란 ‘특정지역의 주민이 일정한 동기 내지 목적을 갖고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것’(이정석, 2008a: 31)이며, 시민참여란 ‘특히 정책이나 계획 등의 결정과정에 시민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이정석, 2008a: 33)⁸⁾.

따라서 본 연구에서 말하는 외국인주민의 시정참여란 기본적으로 전술한 ‘주민참여’의 정의를 차용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지만, 참여 주체가 외국인주민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외국인 ‘시정참여’와 관련된 사회적 기반이 빈약하다는 점에서 약간의 수정을 필요로 한다. 즉, 외국인주민의 시정참여란 ‘진주시의 외국인주민이 주민의 일원으로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으로 진주시의 정책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⁹⁾.

외국인주민의 시정참여를 이렇게 정의내릴 경우, 외국인주민의 시정참여 방식은 참여 정도에 따라 다음의 세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이정석, 2008b). 첫 번째 단계는 소극적인 의미의 시정참여로 외국인주민이 정책대상으로 설정되는 것이다. 즉, 외국인주민이 주민과 마찬가지로 시정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국인

- 6) ‘불법체류자’의 직접적인 시정참여 문제는 실정법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참여까지 가로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민간단체와 같은 연계기관의 활용 등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행정자치부, 2007: 6)가 있는 만큼, 민간의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나 외국인주민들의 공동체를 통해 ‘불법체류자’들의 다양한 의견까지도 수렴한 다음, 그러한 연계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최소한의 고충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불법체류자’의 시정참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7) 동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본다”(법 제12조)고 되어 있으므로, 외국인주민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이해된다.
- 8) 中野(1976)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의식이 ‘주관적’이면 주민참여이고, ‘객관적’이면 시민참여로 구분하여, 이해관계의 범위와 관련지어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만을 관심분야로 하는가, 아니면 사회 전체적인 이익 실현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분은 개념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양자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본 연구에서는 양자를 넓은 범위의 주민참여로서 이해하고, 각 개념 간에 엄밀한 구분을 시도하지 않는 입장을 취한다(이정석, 2008a: 33-34).
- 9) 이러한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이정석(2008b)을 준용하였음을 밝힌다.

주민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주민의 존재를 간과할 수 없을 만큼 수적 증가가 현저해졌기 때문인데, 외국인주민이 정부(중앙 및 지방)의 정책입안을 비롯한 정책과정에 있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시정참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외국인주민 스스로 참여의 주체가 되어 시정에 개입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외국인 관련 행사 및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 같은 입장에 있는 외국인주민들끼리 커뮤니티를 결성해 자신의 권리옹호를 위해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것, 외국인주민 관련 정책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매스컴이나 인터넷을 통해 의사를 표현하는 것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된다.

세 번째 단계는 가장 적극적인 의미의 시정참여로 외국인주민이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행사하는 것이다.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외국인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¹⁰⁾. 다만, 공직선거법(제15조)·주민투표법(제5조)·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3조)은 영주권을 가지고 거주요건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외국인¹¹⁾에게 예외적으로 지방참정권(공직선거권·주민투표권·주민소환투표권)을 인정하고 있다¹²⁾. 또한, 반상회나 각종 위원회·자문회의에 (자문)위원으로서 출석하는 것이나 이·통장 등 행정의 최말단 기관으로서 일선에서 지역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봉사하는 것도 포함된다¹³⁾.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이거나 투표 등에 참여하여 실제적으로 정책형성에 이해당사자로서 의견을 반영하고, 지지 후보에게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시정·정치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이용승·이용재, 2013).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외국인주민을 주민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위한 각종 사업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성격 면에서 시혜성 사업과 지원정책에 머물러 있어, 적극적인 수준의 시정참여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외국인주민의 인구 구성과 외국인정책에 맞춰 외국인주민이 지역주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주민의 시정참여 활성화가 절실하다.

10) 현재 외국인주민에게는 지방참정권 중 주민소송권, 주민감사청구권, 조례 개·폐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11)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영주권을 얻은 뒤 3년이 지난 19살 이상의 외국인”(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에게, 주민투표권은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주민투표법 제5조 제2항)에게, 주민소환투표권은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게 부여된다.

12) 실제로 2005년 7월 27일 제주도 내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단일광역자치단체로 개혁하는 혁신안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되었을 때, 처음으로 외국인들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되었으며,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외국인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것은 법률 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된 것인데, ‘국민’의 대표를 뽑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는 달리, 지방선거는 ‘주민’의 대표를 뽑는다는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이정석, 2008b).

13) 결혼이주여성(조선족 출신)으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함안군 함안면 금천마을의 3년차 이장으로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박복순 씨의 경우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이정석, 2008b; 「경남신문」, 2010; 「한국농어민신문」, 2010).

2. 진주시 외국인주민 현황 및 시정참여 실태

1) 진주시 외국인주민 현황

경남의 외국인주민 수는 89,986명(2013.1.1 기준)으로, 한국 전체 외국인주민 1,445,631명의 6.2%, 경상남도 주민등록인구의 2.7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진주시의 외국인주민 수는 5,817명으로, 경남도내에서 통합창원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에 이어 5번째로 많은 수준이며, 주민등록인구의 1.72%를 차지하고 있다¹⁴⁾. 진주시로의 외국인의 유입은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는데, 상평공단을 중심으로는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했으며, 경상대학교가 외국인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게 되면서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외국인주민이 늘게 되었다(김윤경, 2014).

〈표 1〉 진주시 외국인주민 유형별 분류

(단위: 명, %)

한국국적 취득자(8.5%)									외국인주민 자녀(20.8%)											
합계			결혼이민자			유학생			합계			외국인부모			외국인-한국인부모			한국인부모		
소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소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496	21	475	449	6	443	47	15	32	1,211	656	555	31	16	15	1,096	595	501	84	45	39
한국국적 미취득자(70.7%)																				
합계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주			기타 외국인					
소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4,110	2,453	1,657	2,041	1,792	249	773	59	714	654	309	345	203	120	83	439	173	266			
진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국적별 순위(8위까지)																				
베트남(1)			중국(2)			중국(한국계)(3)			미국(4)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354	777	577	722	308	414	363	222	141	161	92	69									
(32.9)	(57.4)	(42.6)	(17.6)	(42.7)	(57.3)	(8.8)	(61.2)	(38.8)	(3.9)	(57.1)	(42.9)									
몽골(5)			인도네시아(6)			필리핀(7)			캄보디아(8)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46	89	57	125	117	8	119	39	80	116	52	64									
(3.6)	(61.0)	(39.0)	(3.0)	(93.6)	(6.4)	(2.9)	(32.8)	(67.2)	(2.8)	(44.8)	(55.2)									

주: 외국국적동포란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인 사람 중 국내 거소 신고자를 말하는데, 2011년에 “재외동포”에서 명칭이 변경하였다. 한편, 거소는 재외국민(영주권자)과 재외동포 자격(시민권자)으로 한국에 장기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자료: 안전행정부(2013)에서 작성.

<표 1>과 같이 진주시의 외국인주민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8.5%), 외국인주민 자녀(20.8%),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70.7%)로 나뉘는데, 7할 정도가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주시의 외국인주민 현황과 더불어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근로자 2,041명(35.1%), 결혼이민자 1,222명(21.0%), 외국인주민 자녀 1,211명(20.8%), 유학생 701명(12.1%) 등의 순으로 많았다. 둘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90.5%는 여성결혼이민자이고, 국적 취득자의 9.5%는 유학생으로 나타났다.

14) 통계청 홈페이지(KOSIS)(검색일: 2014.2.20).

셋째, 외국인주민 자녀의 90.5%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중 외국인근로자(49.7%)가 가장 많고, 결혼이민자(18.8%), 유학생(15.9%) 등이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진주시 외국인주민 중 한국국적 미취득자의 국적별 순위를 살펴보면, 베트남(32.9%)이 단연 높았고, 중국(17.6%), 중국(한국계)(8.8%), 미국(3.9%), 몽골(3.6%), 인도네시아(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3년 진주통계연보(2012년 12월 31일 기준, 진주시 민원봉사과 자료)’¹⁵⁾의 외국인 국적별 등록현황을 보면, 진주시에 외국인등록을 한 전체 주민 중 절반 정도의 인구가 상평동(17.0%), 가호동(16.8%), 상대1·2동(9.7%), 문산읍(5.8%)에 집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공단지역과 대학교(경상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를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해 있어, 진주시의 외국인 유입이 취업과 학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진주시 외국인주민 시정참여 실태

(1)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진주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 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2007.8.9 제정, 2008.11.12 개정)이다. 이 조례에 따라 외국인주민은 주민과 동일한 지위로서 시의 재산과 공공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¹⁶⁾. 더구나, 시장은 외국인주민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 제2항). 제4조에는 시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첫째,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제1항). 둘째, 시장은 다음 해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제2항). 셋째,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제3항). 이 조례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것은 지원대상(제5조)으로,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조례에서 ‘불법체류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할 방법은 논의하고 있지 않은데, 법에 의한 보호는 법 테두리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진주시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경우,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구성된 것으로, 진주시는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수립·결정 및 자문을 위해 2008년 4월에 설치했다.

15) http://stat.nongae.net/html/index.asp?dd_yy=2013(검색일: 2014.2.28).

16)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제한이나 주민투표권 제한(「진주시 주민투표 조례」 제3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자는 예외)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의 5가지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 시책,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외국인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이 위원회는 민간위원이 8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외국인주민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외국인주민 맞춤형 지원시책을 논의하는 장으로써 부족한 점이 있다.

한편, 진주시의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이다. 한국어·문화교육, 가족교육·상담, 자녀지원, 직업교육 및 다문화인식 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 및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 기관인 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 영재교실’ 운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대부분 연간 10개월 이상씩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외국인주민을 위해 전개하는 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외국인주민이 수혜자 입장에 반해, ‘나눔봉사단 모집 및 운영’ 사업은 외국인주민이 도움을 주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른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소극적인 시정참여라고 한다면, 외국인주민이 나눔봉사단 활동을 하는 것은 적극적인 시정참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의 지원사업으로는, ‘외국인주민도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과 ‘세계인의 날’ 개최, ‘모범 외국인근로자 문화탐방’,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주시 바로 알고 알리기 관광 투어’,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운영’¹⁷⁾ 등이 있다.

(2) 관내 기관 및 단체의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① 국립진주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은 한국 문화와 역사에 관심 있는 외국인(다문화 가정, 외국인유학생,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성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의 향기를 느끼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진주박물관은, 이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서부경남 지역의 역사 문화와 더불어 임진왜란과 진주대첩에 대한 내용을 외국어로 제공하여 박물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프로그램 참여자들에 대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보다 빠르게 문화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궁극적으로 ‘한국 문화 알리미’로 양성하여 박물관의 외국인 유치기반을 점진적 확대하며, 다양한 전통체험을 통하여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진행방법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언어(영어, 일어, 중국어)로 진행하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형식을 취하며, 참여자와 진행자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2012년도 프로그램을 보면, 문화 둘러보기(박물관 소개, 한복 소개), 3D 입체영화 관람, 박물관 전시관람, 전통문화 체험 등이 포함된다.

17)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진주시장은 외국인 중 시정발전에 공로가 있고 시민과 외국인주민의 귀감이 되는 자·(중략)·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② 진주 YWCA

진주 YWCA의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다문화교육부 사업을 통한 활동이다. 진주 YWCA는 2005년 겨울 베트남 결혼이민자 여성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한글과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다문화교육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2006년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진주 YWCA 다문화교육부의 주요 사업영역은 한국어교실, 다문화가족통합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홍보 및 네트워크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또한 진주 YWCA는 건강한 다문화를 위해 결혼이주여성들의 특화직종 개발과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 ‘꿈을 잡(Job)아라’를 2012년에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고용노동부 연계사업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이주여성 특화직종 양성과정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기관 연계 취업 알선,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하여 이주여성 인턴제 운영, 폴리텍대학과 연계하여 기업맞춤형 알선사업, 돌봄서비스 사업 훈련 및 알선 등을 실시하였다. 교육수료 후에는 동행면접을 통해 맞춤형취업연계(전액무료)를 실시하였다. 기타 다양한 활동으로는, 가족사진촬영, 자녀와 함께 하는 지역문화 체험활동(갤러리아백화점 후원)과 더불어, 다문화 가정 자녀 방과 후 학습지원(다래교실), 엄마나라 이야기 등 문화행사 참여자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 또한, 매주 월·수·금 오전에는 결혼이주여성을, 매주 화·목·금 저녁에는 유학생과 외국인근로자그룹을 대상으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매주 월·수 오후 및 금요일 오후에 KT 써포터즈의 도움으로 컴퓨터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③ 진주경찰서

진주경찰서는 외사협력자문위원들의 협조를 받아 회사에 다니는 외국인근로자 16명과 경상대학교 유학생 5명으로 총 21명의 「진주시 외국인자율방범대」를 구성했다. 2012년 12월 상평동에서 발생했던 베트남인 살인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스스로 준법정신을 키우고 자국민의 범죄예방 활동에 동참하자는 뜻에서 2013년 1월 14일 경남도내에서 최초로 발족하였다. 매주 금요일마다 순찰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주요 활동으로, 방범활동은 5명씩 4개조가 돌아가며 매주 금요일 밤 9시~11시까지 진주경찰서 외사계 경찰과 함께 순찰을 하는 것이다. 진주시 상대지구대 관내에서 야간범죄 가능성이 높은 상평동 및 상대동의 주택가와 주점가 일대를 직접 도보 순찰하는 방식이다.

④ 진주시의사회

진주시의사회는 2008년 10월 14일 ‘외국인근로자 진료소’ 개소식을 갖고 19일부터 진료를 개시하였다. 외국인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저소득계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도내에서는 세 번째로 개소하였다. 진료소 활동에는 진주시의사회 회원, 경상대학교병원 간호사회 등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운영은 진주시의사회 사회복지예산과 성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진료는 매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연중무휴로 실시되며 장기진료나 정밀검사가 필요한 환자는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지속적인 진료가 추진 되도록 하고 있다. 진주시뿐만 아니라 서부경남 전체의 외국인근로자들까지 이용하고 있다.

⑤ 진주시 봉곡동 제1·7지역 로타리클럽

진주시 봉곡동 제1·7지역 로타리클럽은 진주시 및 인근 사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건강과 기본적인 치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사랑의 진료소’를 마련하였다. 2002년 12월 8일 개소식을 가진 ‘사랑의 진료소’에서는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진료소를 찾은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이 진료소는 경상대학병원 불자들의 모임인 보련회 회원들인 전문의 20명과 간호사들, 로타리클럽 회원인 의사 9명, 진주시 지역 약사 5명 등이 참여해 만들었다.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를 구분하지 않고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진주시 외국인주민 시정참여 실태를 진주시가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과 관내 유관 기관 및 각종 단체 등이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진주시에는 실질적으로 외국인주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마련되어 있고, 이를 돕는 공공 혹은 민간 차원의 활동도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대부분이 사업들이 외국인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그들의 간접적인 참여를 유도한다고 하는 소극적인 시정참여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들 사업 간에 명확한 연결고리나 연계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었다. 다양한 기관(단체)이 각 주체별로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외국인주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전수조사 및 지원실태 분석, 중복·중첩되는 기능의 조정이나 갈등 관리의 역할을 전담하는 허브기관의 존재 및 파트너십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Ⅲ. 외국인주민 대상 설문조사

1. 연구설계

본 설문조사는 진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주시의 외국인 정책 및 시정참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의 시정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 원어민 교사, 외국인유학생 등 진주시가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할 외국인주민이다. 조사대상이 외국인이고 이들을 시정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란 특수성 때문에 표본추출은 외국인의 유형을 고려한 할당표본추출과 편의표본추출을 병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주시다문화지원센터, 민간 외국인지원센터, 경상남도 진주교육지원청, 경상대학교 대외협력과의 협조를 얻어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최종적으로 회수한 설문지는 총 101부였으며, 부실이나 오류가 없어 101부 모두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조사의 총 소요기간은 2013년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20일 간이었다.

설문 문항은 기존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는데, 명목척도와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한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이 혼합되어 있다. 설문지 결과에 대한 분석방

법은 사회과학 통계 프로그램인 SPSS 19.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주로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교차분석을 통한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했다.

2. 분석

1) 응답자 특성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52명(51.5%)으로 여성 49명(48.5%)보다 약간 많았다. 국제결혼이주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반면, 외국인근로자(5:1)와 원어민 교사(2:1)의 성비가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체재기간에 있어서는 ‘2년 초과~4년 이하’가 33.0%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약 22% 수준으로 비슷했다. 외국인 유형별로는 국제결혼이주자가 33명(33.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외국인근로자(31.3%), 원어민교사(21.2%), 유학생(12.1%), 기타(2.0%)가 뒤를 이었다. 한국 국적 취득 여부는 미취득자가 83명(85.6%)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이 중 국적 취득을 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3.4%로,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56.6%)에 비해 적었다. 한편, 한국 국적 취득 계획의 유무를 외국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제결혼이주자의 84.2%, 유학생의 45.5%, 외국인근로자의 37.9%, 원어민교사의 14.3%의 순으로 계획이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정의	n	%	변수	정의	n	%
성별 (n=101)	남자	52	51.5	국적취득예정 (n=83)	있음	36	43.4
	여자	49	48.5		없음	47	56.6
체재기간 (n=97)	2년 이하	22	22.7	출신국 (n=101)	동남아시아	35	34.7
	2년 초과~4년 이하	32	33.0		남아시아	28	27.7
	4년 초과~6년 이하	21	21.6		동아시아	15	14.9
	6년 초과	22	22.7		아메리카	15	14.9
					유럽	5	5.0
외국인유형 (n=99)	국제결혼이주자	33	33.3	중아시아	3	3.0	
	외국인근로자	31	31.3	체류자격 (n=97)	결혼이민	35	34.7
	원어민교사	21	21.2		비전문취업	23	22.8
	유학생	12	12.1		구직	13	12.9
	기타	2	2.0		유학	12	11.9
			거주		5	5.0	
한국국적 (n=97)	취득	14	14.4	기타	9	9.0	
	미취득	83	85.6				

이러한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χ^2 값은 20.459, 유의확률은 .000으로서 유의수준 .001($p < .001$)에서 외국인 유형에 따라 한국 국적 취득 계획 유무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출신국가를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동남아시아(베트남 18.8%, 필리핀 10.9%

등)가 34.7%로 가장 많고, 남아시아(파키스탄 12.9%, 방글라데시 5.0% 등)는 27.7%이며, 동아시아(중국 조선족 포함) 등의 순으로 많았다. 베트남 출신 국제결혼이주자 및 외국인근로자가 각각 가장 많았다. 체류자격을 살펴보면 결혼이민이 35명(34.7%)으로 가장 많고, 비전문취업(22.8%), 구직(12.9%), 유학(11.9%) 등의 순으로 많았다. 비전문취업의 대부분은 외국인근로자이고, 구직의 대부분은 원어민교사였다.

2)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및 기타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41명(40.6%)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보통을 제외했을 때, 부정적 견해¹⁸⁾가 62.4%로 긍정적 견해¹⁹⁾ 30.7%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책에 대한 이해도를 5점 만점²⁰⁾으로 평균을 산출해 보면, 2.40점으로 보통(들어본 정도)(3.0점)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 일반사항 중 성별, 한국 체재기간, 외국인유형, 국적 취득 여부, 국적 취득 계획 여부, 출신국(지역분류)에 따른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이해도의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였다(<표 3> 참조).

<표 3> 성별, 외국인유형별, 국적취득여부별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이해도

단위: 명(%)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이해도	성별**			외국인 유형***				국적 취득여부*		
	남자	여자	합계	국제결혼 이주자	외국인 근로자	기타 (유학생, 원어민교사)	합계	예	아니오	합계
모름	38 (73.1)	25 (51.0)	63 (62.4)	12 (36.4)	20 (64.5)	27 (81.8)	59 (60.8)	6 (42.9)	57 (68.7)	63 (65.0)
보통	0 (0)	7 (14.3)	7 (6.9)	7 (21.2)	0 (0)	0 (0)	7 (7.2)	3 (21.4)	4 (4.8)	7 (7.2)
암	14 (26.9)	17 (34.7)	31 (30.7)	14 (42.4)	11 (35.5)	6 (18.2)	31 (32.0)	5 (35.7)	22 (26.5)	27 (27.8)
합계	52 (100.0)	49 (100.0)	101 (100.0)	33 (100.0)	31 (100.0)	33 (100.0)	97 (100.0)	14 (100.0)	83 (100.0)	97 (100.0)

성별: $\chi^2=9.892$, $df=2$, 외국인유형: $\chi^2=22.494$, $df=4$, 국적취득여부: $\chi^2=6.174$, $df=2$, * $p<.05$, ** $p<.01$, *** $p<.001$.

우선, 성별에 있어서 남자 52명 중 알고 있는 사람은 14명으로 26.9%이며 여자 49명 중 알고 있는 사람은 17명(34.7%)으로 여자의 이해도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유의한 지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χ^2 값은 9.892, 유의확률은 .007로서 유의수준 .01에서

18) 여기에는 ‘거의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가 포함된다. 이하 동일하다.

19) 여기에는 ‘약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포함된다. 이하 동일하다.

20) 점수 부여 원칙은 다음과 같다. 즉,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거의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하 동일하다.

($\rho < .01$) 성별에 따라 이해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외국인유형에 있어서 국제 결혼이주자 33명 중 알고 있는 사람은 14명으로 42.4%이고, 외국인근로자 31명 중 알고 있는 사람은 11명으로 35.5%이며, 기타(외국인유학생, 원어민교사) 33명 중 알고 있는 사람은 6명으로 국제결혼이주자, 외국인근로자, 기타의 순으로 이해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χ^2 값은 22.494, 유의확률은 .000로서 유의수준 .001에서 ($\rho < .001$) 외국인유형에 따라 이해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적 취득 여부에 있어서 국적 취득자 14명 중 알고 있는 사람은 5명으로 35.7%이고, 국적 미취득자 83명 중 알고 있는 사람은 22명으로 26.5%로 국적 취득자의 이해도가 국적 미취득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χ^2 값은 6.174, 유의확률은 .046으로서 유의수준 .05에서 ($\rho < .05$) 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 이해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머지 응답자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진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외국인주민의 이해도는 유형별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표 4> 참조). 우선,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1개 사업(다문화가족 어울림 명랑운동회 실시)을 제외하고 ‘잘 안다’(4.0점)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유형의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질문한 세 가지 사업과 외국인유학생, 외국인근로자, 원어민교사 등에 한정했던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보통’(3.0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이해도가 낮았다.

〈표 4〉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외국인주민의 이해도(평균 순위)

순위	구분	평균	비고(응답자)
1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단계별)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4.55	결혼이주여성만
2	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4.48	"
3	편의제공(자녀를 위한 육아정보나눔터 운영 및 셔틀버스 운행)	4.39	"
4	결혼이민자 모의 투표 체험 실시	4.27	"
5	다문화가족 취업지원교육 실시	4.24	"
6	찾아가는 방문교육서비스(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4.24	"
7	부부·부모·자녀문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상담 실시	4.21	"
8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사업 운영	4.21	"
9	다문화 가정 119체험교육 및 생활안전 경연대회 실시	4.12	"
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나눔봉사단 운영	4.09	"
11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번역지원서비스 실시	4.06	"
12	다문화 가정 합동결혼식 실시	4.06	"
13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 영재교실 강사 및 교육재료 지원	4.00	"
14	다문화가족어울림 명랑운동회 실시	3.36	"
15	외국인유학생 대상, 진주시 바로 알고 알리기 관광 투어 실시	2.75	외국인유학생만
16	외국인과 함께 하는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2.40	공통
17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정	2.40	공통
18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외국인주민도 진주시민과 동일한 보장	2.28	공통
19	외국인근로자 혹은 원어민 교사 초청 문화탐방 행사 실시	2.00	외국인근로자 및 원어민교사만
20	진주경찰서 외국인(근로자/유학생) 자울 방법대 활동	1.96	외국인유학생 및 외국인근로자만
21	진주시의사회 외국인근로자 진료소 개소를 통한 진료 서비스	1.84	외국인근로자만

다음으로, 모든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세 가지 지원사업(공통)에 대하여 응답자 일반사항에 따른 이해도의 분포의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세 문항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국제결혼이주자>외국인근로자>기타의 순으로, 국적 취득자가 국적 미취득자보다 이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과 함께 하는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와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외국인주민도 진주시민과 동일한 보장이라는 지원사업에 한해서는 국적 취득 계획이 있는 자가 그렇지 않은 자보다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역시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도를 높이는 특단의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타 시·군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의 진주시 도입 필요도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진주시의 외국인주민들은 진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 이외에도 경남도내 타 시·군의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내지 사업 전부에 대해 ‘보통(3.0점)’ 이상의 필요도를 나타내 앞으로 확대 시행을 검토해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일단 도입해 놓으면 자신들도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여기서도 결혼이주여성에게만 질문한 문항에서 그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결혼이주여성의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표 5> 경남도내 타 시·군의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도입 필요도(평균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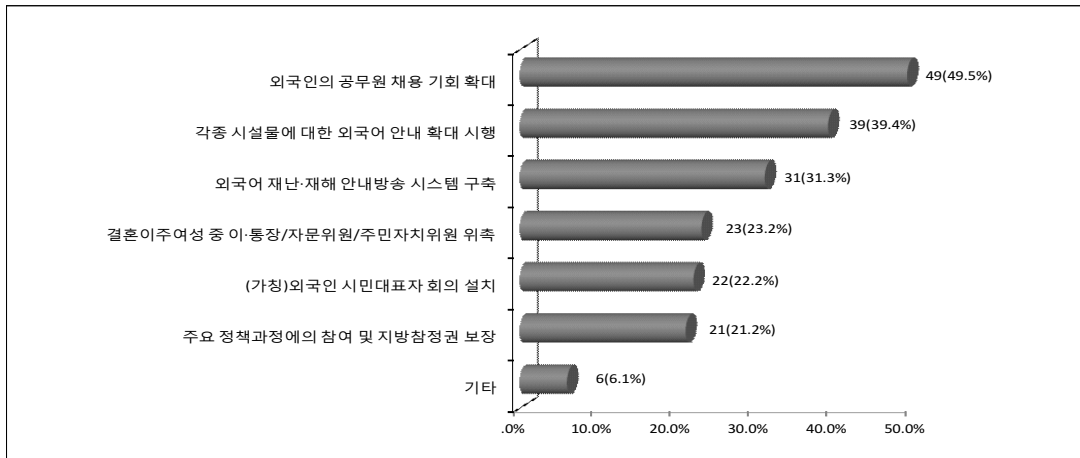
순위	구 분	평균	비고(응답자)
1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생활요리 책자 발간	4.36	결혼이주여성만
2	다문화가족자녀 외갓집 방문 지원사업	4.21	결혼이주여성만
3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비 지원	4.21	결혼이주여성만
4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행사	4.15	결혼이주여성만
5	다문화가족 동아리 지원사업	4.06	결혼이주여성만
6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인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	4.03	결혼이주여성만
7	외국인주민을 위한 국제센터·복지센터의 운영	3.86	외국인주민 공통
8	외국인주민 대상 노동 및 인권 교육	3.83	외국인주민 공통
9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개최	3.81	외국인주민 공통
10	외국인주민을 위한 외국인 주민센터 시범 운영	3.76	외국인주민 공통
11	외국인주민 생활안내서(생활편리수첩) 등의 제작·배포	3.63	외국인주민 공통

4) 기타 진주시에 제안할 수 있는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

현재 진주시에서 제공하고 있거나 타 시·군에서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 이외에 진주시에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책을 질문한 다중응답에서, <그림 1>과 같이 전체 99명 중 49명(49.5%)이 ‘외국인의 공무원 채용 기회 확대’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 다

음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외국어 안내 확대 시행이 39명(39.4%)이고, 이어서 외국어 재난·재해 안내방송 시스템 구축이 31명(3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책과정예의 참여 및 지방참정권 보장은 21명(21.2%)으로 가장 적게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교육연구센터, 즉 외국인들이 전화할 수 있는 곳 혹은 외국인들이 정보, 조언, 도움을 얻기 위해 방문할 수 있는 사무실’, ‘남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강좌가 필요(남자들은 대부분 일하고 있어서 커뮤니티 센터 언어반 이용 불가)’, ‘차별 방지 예방 센터’ 등이 있었다.

〈그림 1〉 기타 진주시에 제안할 수 있는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N=99)



주: 빈도(N)=191, 케이스퍼센트=192.9%.

5) 진주시의 구성원 인식

(1) 지역공동체(진주시)의 구성원 인식 여부

자신을 지역공동체(진주시)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58명(59.2%)으로 가장 많았다(<표 6> 참조). 이에 반해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은 17.3%로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23.5%로 아직 명확하게 자신을 진주시의 구성원으로 인식하지 않은 외국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인식하는지 여부

단위: 명(%)

자신을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생각	성별*		
	남자	여자	합계
예	26(50.0)	32(69.6)	58(59.2)
아니오	14(26.9)	3(6.5)	17(17.3)
잘 모르겠다	12(23.1)	11(23.9)	23(23.5)
합계	52(100.0)	46(100.0)	98(100.0)

$\chi^2=7.442$, $df=2$, * $p<.05$.

한편, 응답자 일반사항 중 성별·한국 체재기간·외국인유형·국적취득여부·국적취득계획여부·출신국(지역분류)에 따른 자신을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인식하는지 여부의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한 결과, 성별에 있어서 남자 52명 중 ‘예’라고 응답한 사람은 26명으로 50.0%이며 여자 46명 중 ‘예’라고 응답한 사람은 32명(69.6%)으로 여자의 긍정적인 응답이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χ^2 값은 7.442, 유의확률은 .024로서 유의수준 .05에서($p < .05$) 성별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머지 응답자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2) 진주시정에 관한 관심과 정보 획득 경로

진주시정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많다’고 응답한 사람이 31명(32.6%)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보통을 제외했을 때, 긍정적 견해(관심 있음)가 45.3%로 부정적 견해(관심 없음) 33.7%에 비해 11.6%p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 수준을 5점 만점으로 평균을 산출해 보면, 3.18점으로 보통(3.0점) 수준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 일반사항 중 성별·한국 체재기간·외국인유형·국적취득여부·국적취득계획여부·출신국(지역분류)에 따른 진주시정에 대한 관심도의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였다. 우선, 성별에 있어서 남자 52명 중 ‘관심 많다’고 응답한 사람은 17명(32.7%)이며 여자 43명 중 ‘관심 많다’고 응답한 사람은 26명(60.5%)으로 여자의 진주시정에 대한 관심도가 남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χ^2 값은 7.397, 유의확률은 .025로서 유의수준 .05에서($p < .05$) 성별에 따라 진주시정에 대한 관심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적 취득 여부에 있어서 국적 취득자 12명 중 진주시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9명(75.0%)이고, 국적 미취득자 79명 중 진주시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34명(43.0%)으로 국적 취득자의 진주시정에 대한 관심도가 국적 미취득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χ^2 값은 6.563, 유의확률은 .038로서 유의수준 .05에서($p < .05$) 국적취득여부에 따라 진주시정에 대한 관심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머지 응답자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표 7> 참조).

〈표 7〉 성별, 국적 취득 여부별 진주시정에 대한 관심도

단위: 명(%)

진주시정에 대한 관심도	성별*			국적 취득 여부*		
	남자	여자	합계	예	아니오	합계
부정적	22(42.3)	10(23.3)	32(33.7)	0(0)	28(35.4)	28(30.8)
보통	13(25.0)	7(16.3)	20(21.1)	3(25.0)	17(21.5)	20(22.0)
긍정적	27(32.7)	26(60.5)	43(45.3)	9(75.0)	34(43.0)	43(47.3)
합계	52(100.0)	43(100.0)	95(100.0)	12(100.0)	79(100.0)	91(100.0)

성별: $\chi^2=7.397$, $df=2$, 국적 취득 여부: $\chi^2=6.563$, $df=2$, * $p < .05$.

진주시정과 관련된 정보를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접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다중응답에서, 전체 96명 중 46명(47.9%)이 ‘외국인 친구’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 다음은 한국인 친구가 36명(37.5%)이고, 이어서 인터넷 매체가 29명(30.2%), 학교가 22명(2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공서로부터의 안내우편은 4명(4.2%)으로 가장 적게 응답하였다. 기타 응답으로는 ‘공장’, ‘한국인부인’, ‘회사’ 등이 있었다.

6) 외국인주민의 시정참여 관련 사항

(1) 진주시정에 참여한 경험 유무 및 참여 방법

진주시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이 55명(57.9%)이었다. 반면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은 40명(42.1%)으로 나타났는데, 이로써 시정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15.8%p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40명을 대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시정에 참여하였는지를 질문한 다중응답에서, 전체 40명 중 25명(62.5%)이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에 참여’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 다음은 시가 주관·주최·후원하는 행사 및 축제에 참여가 10명(25.0%)이고, 이어서 봉사활동에 참여가 8명(2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의견 제시는 4명(10.0%)으로 가장 적게 응답하였다.

(2) 진주시정에 참여할 의향 및 참여할 의향이 없는 이유

진주시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거의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37명(40.2%)으로 가장 많았다. <표 8>를 살펴보면, 보통을 제외했을 때, 부정적 견해(참여 의향 없음)가 56.2%로 긍정적 견해(참여 의향 있음) 31.5%에 비해 약 1.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 수준을 5점 만점으로 평균을 산출해 보면, 2.63점으로 보통(3.0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외국인유형별 진주시정에 참여할 의향

단위: 명(%)

진주시정에 참여할 의향	외국인 유형*			
	국제결혼이주자	외국인근로자	기타(유학생, 원어민교사)	합계
없음	9(36.0)	23(74.2)	18(54.5)	50(56.2)
보통	6(24.0)	0(0)	5(15.2)	11(12.4)
많음	10(40.0)	8(25.8)	10(30.3)	28(31.5)
합계	25(100.0)	31(100.0)	33(100.0)	89(100.0)

$\chi^2=11.307$, $df=4$, *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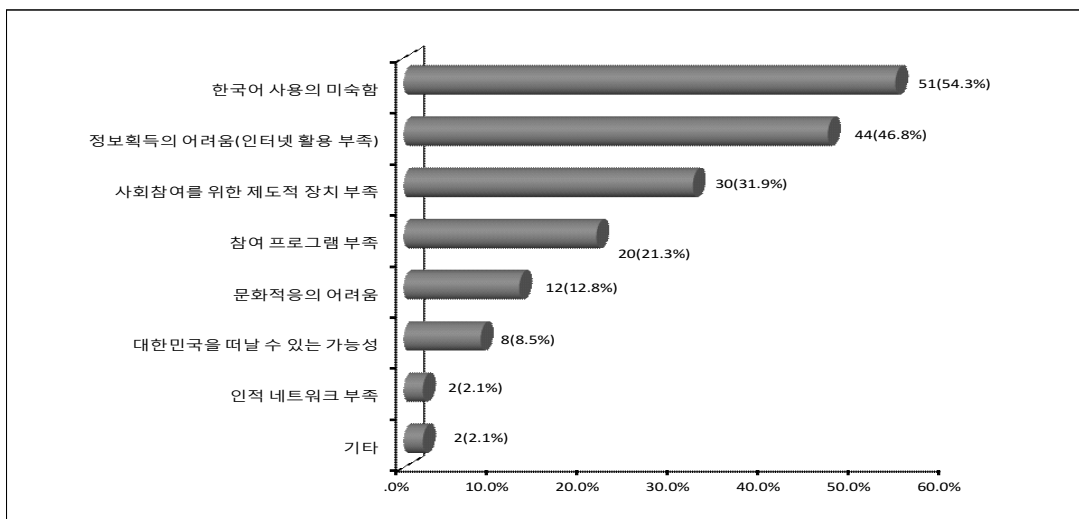
한편, 응답자 일반사항 중 성별·한국 체재기간·외국인유형·국적취득여부·국적취득계획여부·출신국(지역분류)에 따른 진주시정에 참여할 의향의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였다. 우선,

외국인유형에 있어서 국제결혼이주자 25명 중 참여할 의향이 많다고 응답한 사람은 10명(40.0%)이고, 외국인근로자 31명 중 참여할 의향이 많다고 응답한 사람은 8명(25.8%)이며, 기타(외국인 유학생, 원어민교사) 33명 중 참여할 의향이 많다고 응답한 사람은 10명(30.3%)으로 국제결혼이주자, 기타, 외국인근로자의 순으로 참여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외국인근로자(74.2%), 기타(54.5%), 국제결혼이주자(36.0%)의 순으로 참여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χ^2 값은 11.307, 유의확률은 .023으로서 유의수준 .05에서($p < .05$) 외국인유형에 따라 필요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머지 응답자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 진주시정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50명을 대상으로 참여할 의향이 없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시간적 여유 부족’이 25명(50.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진주시정에 대한 무관심이 13명(26.0%)이고, 이어서 참여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이 8명(1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들의 반대는 2명(4.0%)으로 가장 적게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언어장벽’이 있었다. 한편, 응답자 일반사항별로 진주시정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이유의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3) 진주시정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 및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
 진주시정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다중응답에서, <그림 2>와 같이 51명(54.3%)이 ‘한국어 사용의 미숙함’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 다음은 정보획득의 어려움(인터넷 활용 부족)이 44명(46.8%)이고, 이어서 사회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부족이 30명(31.9%), 참여 프로그램 부족이 20명(2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적 네트워크 부족은 2명(2.0%)으로 가장 적게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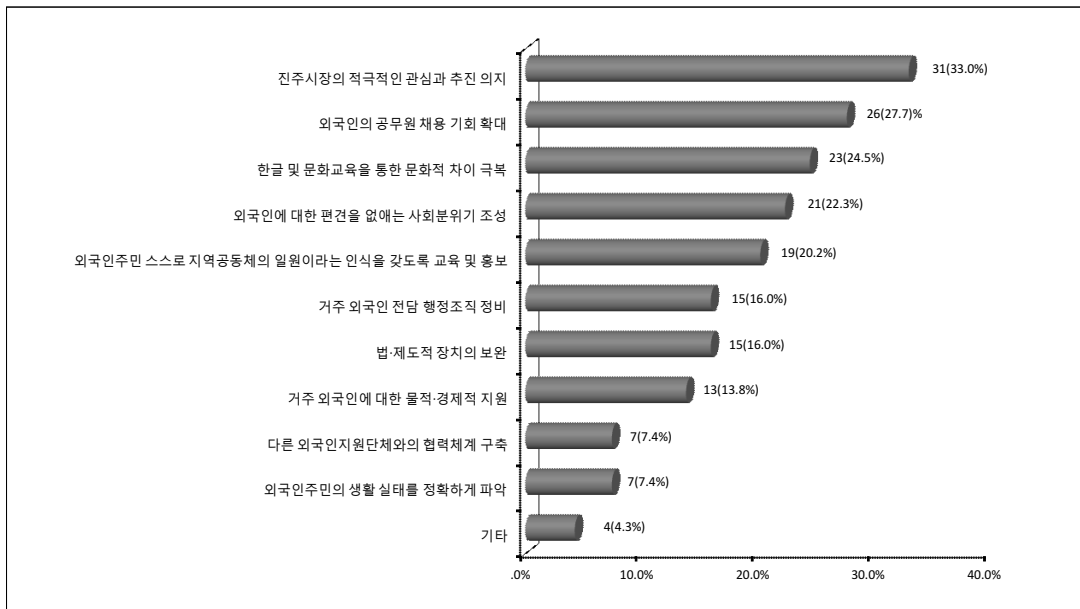
<그림 2> 진주시정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



주: 빈도(N)=94, 케이스 퍼센트=179.8%.

한편, 외국인주민을 진주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진주시에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다중응답에서, <그림 3>과 같이 31명(33.0%)이 ‘진주시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 의지’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 다음은 외국인인의 공무원 채용 기회 확대가 26명(27.7%)이고, 이어서 한글 및 문화교육을 통한 문화적 차이 극복이 23명(24.5%),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21명(22.3%), 외국인 주민 스스로 지역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교육 및 홍보가 19명(2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주민의 생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은 7명(7.4%)으로 가장 적게 응답하였다.

〈그림 3〉 외국인주민의 진주시정 참여를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



주: 빈도(N)=181, 케이스 퍼센트=192.6%.

IV. 진주시 외국인주민의 시정참여 활성화 방안

1. 시민의식 함양 및 다문화에 관한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한국인이 유독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주민을 업신여기고 무시 혹은 회피하는 등 불신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인종주의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우리 민족은 ‘배달겨레’나 ‘백의민족’으로 교육되어 왔는데, 이제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보수적인 사고방식은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 매년 발표되고 있는 외국인주민 통계만 보더라도 괄목할만한 수적 증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문화국가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경제적·정치적 규칙의 정립을 바탕으로 한

외국인주민 정책의 형성과 사회통합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지중화·정명주·김도경, 2009). 따라서 지역주민과 외국인주민 간의 사회통합에 힘써야 하는 정부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식 전환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의 젊은이들이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다문화사회의 도래는 현실이고,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들을 한국 문화와 생활방식에 억지로 동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리 모두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 관용과 배려의 마음으로 다문화 자체를 포용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을 비롯한 시댁식구들과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인식교육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인식 전환과 실질적인 이해가 가능해지도록 모든 주민들을 교육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때 평생교육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들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진주시장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인 관심 표명과 추진 의지를 밝히고, 로드맵이나 장기 발전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사회 및 한국인들의 인식 변화와 아울러 외국인주민의 시민 의식 함양도 급선무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주민들이 자신을 진주시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지에 대해 59.2%만이 긍정적인 응답을 했으며, 진주시정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45.3%가 긍정적 견해를 보였다. 이는 진주시의 외국인주민 절반 정도만이 스스로를 진주시의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외국인주민의 시정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 즉 주체로서 인식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진주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만 높으며, 그 밖의 외국인주민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주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각 부서에서 실시 중인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특히 공통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내외부의 소통 증진과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주민의 시정참여가 이와 같은 지원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외국인주민에 해당하는 공통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센터를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주민에게 자체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때때로 진주시가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직접 소개하거나 각국어로 작성된 팸플릿 등을 배포함으로써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진주시는 전 외국인주민에 대해 (가칭)‘외국인주민 생활편리수첩’을 제작·배포하면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지원사업을 소개함으로써 외국인주민들이 수혜를 받고 시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유학생들의 경우는 소속 대학의 유학생센터나 국제교류원 등에서, 원어민교사에게는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해당 사업체 대표나 민간 외국인주민지원단체 등이 실질적인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진주시가 지원체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2. 실질적인 시정참여 기회 확대

본 설문조사에서 ‘외국인의 공무원 채용 기회 확대’ 부분이 진주시에 제안할 수 있는 외국인 주민 지원 시책 가운데 가장 높은 응답률인 49.5%를 나타냈다. 또한 이 부분은 외국인주민의 진주시정 참여를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질문에서도 27.7%의 응답률을 보여 2위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외국인의 공무원 채용 기회 확대’는 외국인주민의 요구도가 가장 높으면서도, 시정참여를 강화시킬 수 있는 사항임을 알 수 있다. 외국인주민의 공무원 채용은 대단히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진주시민들조차도 공무원이 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외국인주민을 굳이 공무원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구심도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단 1명의 외국인주민이라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순간 진주시에 거주하는 다수의 외국인주민에게 ‘성공적인 정착’이라는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며, 외국인주민 커뮤니티를 구성해 나가는 구심점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주민의 공무원 채용은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우선은 내년을 목표로 1~2명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²¹⁾ 다문화가족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향후 외국인전용주민센터(신설 필요), 자치단체(지역경제·복지 등 외국인 담당(지원)부서), 통역지원센터 등으로 채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적절히 증원해 나감으로써 현장 중심의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는 민간위원이 8명으로 과반수를 점하고 있지만 외국인주민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지원시책을 논의하는 위원회인 만큼 그 시책의 수요자인 외국인주민의 요구가 충분히 논의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표성을 가지는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주민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그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시책의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신과 관련된 시책형성에 개입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시책제안 및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체성 및 자부심을 부여해 줄 수도 있다. 또한, 나머지 민간위원들은 외국인주민과 자주 소통하여 그들의 고충과 요구를 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위촉함으로써 충분한 토의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법·제도의 개편 및 정비

진주시 거주 외국인주민이 진주시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외국인주민에게 좀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조차도 외국인주민의 62.4%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본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따라서 우선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관한 인식확대 및 홍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시정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부족의 문제는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접근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외국인주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주민들

21) 진주시는 2009년 5월 29일에 「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한 기준을 완화하였다.

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추천 또는 위촉 시에 외국인주민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외국인주민 중에서도 한국 생활을 오래하였거나 한국 문화나 언어에 장벽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농촌 지역에서 이들을 이·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진주시 이·통·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개정하여 외국인주민에게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외국인주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외국인주민 대상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시정참여가 촉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재 진주시의 외국인주민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는 상당히 단편화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협력에 의한 협치를 어렵게 한다. 적어도 진주시 내부 조직에서 만큼은 하나로 통합되고 지휘명령계통이 명확한 조직체계의 형성이 요구된다. 각 부서에 따라 업무분장이 다르다 보니,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주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하는 것도 복잡해지기 때문이다²²⁾. 따라서 진주시의 경우,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외국인주민 관련 업무를 이해관계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행복지원과(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영)를 중심으로 재편한 다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외국인주민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업무위임과 예산지원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민·관 협력체계 구축 차원에서 공공이든 민간부문이든 연계·협력체계를 강화하되, 시는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예산지원도 병행해야 한다.

4. 인프라 보완 및 구축

외국인주민이 진주시정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은 ‘한국어 사용의 미숙함’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시정참여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외국어 안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시설물의 설명은 한글과 영어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지만, 진주시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인과 중국인의 모국어 안내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즉, 기본적으로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이해하고 관심이 있으면 무언가 시정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든가 건의사항 등이 생길 수 있을 테지만, 기초적인 이해도 없는 상황에서는 참여하고 싶은 동기유발도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사용의 미숙함에서 오는 진주시정에 대한 불통을 소통으로 바꾸어 놓으려면 언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진주시에 제안할 수 있는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 가운데, 각종 시설물에 대한 외국어 안내(39.4%)와 외국어 재난·재해 안내방송 시스템 구축(31.3%)이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22) 현 진주시 조직을 개략적으로 파악해 보더라도, 외국인 및 외국인주민 관련 업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행복지원과), 외국인근로자 관련 시책(기업통상담당관 기업육성담당), 투자 기업 유치(투자유치담당관실 투자유치담당),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총무과), 외국인유학생 관련 시책(문화관광과), 기타 등으로 분산되어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을 조정할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 다양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이 제대로 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외국인주민은 주민과 동일한 지위로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배려와 그들의 권리 강화, 그리고 진주시의 국제화 시책 차원에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외국어 안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외국인주민의 시정참여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의 경우처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를 다국어로 번역하여 시의 홈페이지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외국인주민들이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 진주시의 홈페이지에는 진주시의 개요 및 간단한 관광안내에 대한 내용을 일본어와 중국어로 게재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인주민이 진주시에서 살아가기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생활정보는 거의 제공되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 외국인주민들이 ‘시간적 여유 부족’과 ‘진주시정에 대한 무관심’ 등의 이유를 들어 진주시정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진주시정에 참여 의향이 많다고 응답한 국제결혼이주자(40%), 외국인근로자(25.8%), 유학생·원어민교사(30.3%)를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것은 외국인주민의 시정참여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시정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외국인주민은 스마트폰 사용률이 높기 때문에 각종 외국어로 시정정보와 유용한 생활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외국인주민들이 자주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물론 접속할 때마다 시정 마일리지(mileage)를 적립시켜 줌으로써 나중에 각종 행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조치를 취한다면 이용률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앱의 개발에는 시간·돈·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도비와 국비의 지원을 얻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민간부문과 공동 개발해 나가거나, 이미 타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²³⁾을 이용하여 진주시에 맞게 제공하거나, 안전행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도록 지방단체협의회 등을 경유하여 요청한다면 전국적인 활용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외국인정책 및 시정참여에 대한 외국인주민의 인식조사를 통해 외국인주민의 시정참여 활성화 방안들을 도출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진주시는 외국인주민의 보다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부서별로 시행 중인 지원사업이 명확한 연결고리를 갖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진주시에는 외국인주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고, 이를

23) 부산시의 경우, ‘다문화행복스캐치’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하는 공공 혹은 민간 차원의 활동도 전개되고 있다. 다만, 외국인주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진주시의 조직개편을 포함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전담기구 설치, 전담인력 확충, 프로그램 신·증설, 네트워크 강화 등 연계·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외국인주민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위원회·심의회·자문단·시정모니터링 등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행정 현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시키는 실질적인 시정참여의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진주시장의 강력한 지원 의지와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단 한 명의 외국인주민이라도 외국인주민 관련 부서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배려를 통하여 진주시의 정책과정이나 행정현장에 직접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진주시가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간다면 외국인주민들 스스로 마음을 열고 참여할 것이며, 진주시는 지역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외국인주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주민도 이웃’이라는 다문화공생의 지역사회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주민과의 교류의 장을 확대해 외국인주민과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정부·정치계·시민사회단체·주민(외국인주민 포함)’으로 이어지는 민관협력시스템, 즉 거버넌스 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정석, 2008b). ‘불법체류자’를 지원하고 있는 민간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도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넷째, 진주시는 각종 지원사업의 시행 전과 시행 중에도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지속적인 설명 등을 통해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 진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외국인주민의 유형별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대체로 높은 반면, 외국인유학생, 외국인근로자, 원어민교사 등에 한정했던 네 가지 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보통’(3.0점) 수준에도 못 미쳤다. 이 점을 감안하여 특히,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남자’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혹은 원어민교사들이 지원사업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출입국관리사무소, 관내 기업, 고용노동부 진주시청, 상공회의소, 대학, 교육지원청, 각 구청 및 주민센터 등)의 협조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외국인주민의 시정참여는 강제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며, 외국인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진주시 당국과 주민들이 외국인주민을 위해 배려하고 있다는 점을 자각할 수 있도록 ‘감동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평생교육시설을 통한 지역주민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교통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외국어 안내 확대 시행, 스마트폰 앱 개발을 통한 시정에 대한 관심 유도, 진주시청 홈페이지의 개편 혹은 ‘외국인주민 진주시청 홈페이지(가칭)’ 개설,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확한 실태 및 욕구조사 등은 외국인주민들이 진주시를 좀 더 이해한 상태에서 진주시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진주시 전체 외국인주민의 1/3을 초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더 강화하여 시정참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²⁴⁾.

참고문헌

- 경상남도 공보관실. (2012). 「보도자료」, 8.14.
- 김윤경. (2014). 「외국인 밀집지역의 공간적 분포 특성과 영향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 박세훈. (2011). 한국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의 비판적 성찰: ‘다문화 도시정책’의 제언. 「공간과 사회」, 21(2): 5-34.
- 법무부. (2014). 외국인정책, 경제 활성화의 관점에서 바라본다—외국인정책위원회, 2014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보도자료」, 5.16.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3). 「2012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 성은혜. (2011). 부산의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사회과학연구」, 27(2): 247-248.
- 안전행정부. (2013). 「201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정책자료>통계>승인통계)(2013.7.2. 게시).
- 우양호. (2013). 지역사회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해항도시 부산의 ‘다문화거버넌스’ 구축 사례. 「지방정부연구」, 17(1): 393-418.
- 이용승·이용재. (2013). 이주민 정치참여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대구·경북지역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53: 110-130.
- 이정석. (2008a). 주민참여의 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 일본의 주민참여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경남발전」, 91: 30-45.
- 이정석. (2008b).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경남발전연구원.
- 이정석. (2013). 「진주시 외국인주민의 시정참여 활성화 방안」. 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보고서.
- 이철승. (2011). 도내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에 관한 소고. 경남이주민센터 홈페이지>칼럼모음 (<http://mworker.or.kr>)(검색일: 2014.6.27).
- 이혜진. (2012). 일본의 다문화공생 개념과 커뮤니티라디오방송국 FMYY. 「경제와사회」, 96: 360-401.
- 장입숙·이수상. (2012). 일본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보지원 네트워크. 「지방정부연구」, 16(1): 455-476.
- 정명주. (2012).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다문화 정책 실태 분석: 201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1: 87-135.
- 정미애. (2011). 일본의 단일민족국가관에서 다문화공생으로의 인식변화와 다문화공생의 거버넌스. 「한국정치학회보」, 45(4): 239-264.
- 정장엽·정순관. (2014). 한국 다문화가족정책의 정향성 분석: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지방정부연구」, 17(4): 121-142.

24) 경남이주민센터 대표인 이철승 목사는 “외국인주민 정책에서 가장 ‘취약’한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아니라 한국인의 보조 인력이요 잠깐 쓰다 돌려보낼 사람으로 관리될 뿐인 이주노동자라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이철승, 2011)며,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지종화·정명주·김도경. (2009). 한국의 다문화 국가 현상과 새로운 정책모형. 「지방정부연구」, 13(2): 109-137.
- 진주시. (2012). 2012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안내 지침.
- 최병두. (2012). 다문화사회를 대비한 도시 및 지역정책과제. 「국토」, 364: 44-51.
- 하영수. (2012).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 인식도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다문화관련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0(1): 259-287.
- 행정자치부. (2007).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람.
- 「경남신문」. (2010). 함안 여성 이장 늘고 있다. 7.29.
- 「한국농어민신문」. (2010). 기획: 우리 농업에 신(新) 바람을..제4부 이주여성, 당당한 주역으로 ① 금천마을 이장 박복순·외국어교사 이채숙. 4.22.
- 駒井洋. (2006). 「グローバル化時代の日本型多文化共生社会」. 東京: 明石書店.
- 中野嘉一. (1976). 転換期の行政 住民参加と区政. 「年報行政研究」, 12号.
- 原田なほみ. (2004). 外国人集住都市浜松における地域共生の取り組み. 駒井洋 編. 「移民をめぐる自治体の政策と社会運動」. 東京: 明石書店.
- 渡戸一郎. (2009). 多文化都市と自治体行政. 川村千鶴子·近藤敦·中本博皓 編. 「移民政策へのアプローチ—ライフサイクルと多文化共生」. 東京: 明石書店.

이정석(李政碩): 일본 도호쿠(東北)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에서 행정학 박사학위(한·일 대도시권 거버넌스 연구: 대도시제도 도입을 통한 대도시권 내 지방정부 재편과 관련하여, 2006)를 취득하고, 경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부연구위원을 거쳐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도시 및 지방자치행정(거버넌스), 공공정책, 비교행정, 교육자치 등이다. 주요 논문은 “공직자 유연근무제에 대한 인식 및 활성화 영향 요인 탐색”(공저, 2014), “부산시 평생교육 추진체계 정립 및 활성화 방안”(공저, 2014),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모형 제안: ‘지역적 일체성 권역’ 개념의 활용”(2013), “지방정부 글로벌 교육경쟁력의 영향요인과 재정 지원 방안”(2013) 등이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공저, 2012), 「창조적 발상과 지역경쟁력」(공저, 2008) 등이 있다(jslee@bdi.re.kr).

이혜진(李惠珍): 일본 쓰쿠바(筑波)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과학연구과에서 사회학 박사학위(현대 일본의 한국인 미등록노동자에 관한 사회학적 분석: 이동실천, 고토부키초, 커뮤니티유니온, 2011)를 받고 현재 부산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원에 전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이동, 이주, 다문화현상이며, 최근에는 소수자문제와 혐오발언(Hate Speech) 등으로 관심영역이 확대하고 있다. 주요 논문은 “일본의 커뮤니티 유니온과 한국인 노동자”(2013), “이주를 경험한 남녀의 서사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성의 변화”(2013), “일본의 다문화공생 개념과 커뮤니티라디오방송국 FMYY”(2012) 등이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우리 모두 조금 낯선 사람들: 공존을 위한 다문화」(공저, 2013), 「다문화해정론」(공저, 2014) 등이 있다(portsait@gmail.com).

Abstract

Methods of Vitalizing Participation in the Municipal Government: Focused on the Foreign Residents in Jinju

Lee, Jeong-Seok

Lee, Hey-Jin

In the past, supporting policies to foreign residents have been focused only on adaptation and settlement in the Korean society. However, fundamental policy changes are required to unify them as a member of society and make them involve in the social activity with the advent of the real multi-cultural society. This study is aimed at suggesting the methods to guarantee and vitalize the participation of foreign residents in the municipal government for them to settle down in the local community as a member based on the survey of the recognition of foreign residents in Jinju city.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make changes in perception of multiple cultures by education and promotion, to expand practical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the municipal government, to reform and modify various laws and systems, and to supply infrastructure in order to vitalize the participation of foreign residents. Next, five policy proposals are suggested to implement the methods mentioned above; connecting departmental supporting projects by governance system, devising practical participatory methods in the municipal government that let foreign residents participate directly and indirectly, creating an atmosphere of multi-cultural symbiotic society that ‘foreign residents are also our neighbors’, raising the participants’ awareness about supporting projects by promotion, continuous explanation, and so on, and developing the ‘touching administration’ to make foreign residents felt the solicitude of Jinju municipal authorities and residents.

Key Words: Participation in the Municipal Government, Foreign Residents, Methods of Vitalizing, Jinju City